

5.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3년 7월 7일
- 발 의 자 : 김대현·권기훈·손한국
이성오·전태선·조경구·허시영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7월 10일
- 상정일자 :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년 7월 21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전태선 의원)

□ 제안이유

- 대표적인 재난인 화재의 경우 2021년 1,189건에서 지난해 1,294건으로 증가했고, 화재 사망자도 2021년 5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폭염과 태풍같이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재난 예방에 관한 각종 시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의 발생 후 전문 대응 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재난현장에 있는 시민 개개인이 자력으로 대피해야 할 수밖에 없음.

- 하지만 재난으로 건물에 갇히게 되거나, 가스, 연기 등을 흡입하고 의식을 잃어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가 질식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난 초기 대피를 돕는 물품의 필요성은 충분할 것임.
- 재난 대응에 관한 각종 연구에서도 재난의 대응은 외부의 인력도 중요하지만, 자조적인 대처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하며, 재난 초기 대피가능성 향상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음.
- 이에 재난 극초기 시민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물품의 비치 지원해, 재난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함.

□ 주요내용

- 해당 조례는 대구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난인 화재를 중심으로, 재난의 대피에 필요한 물품을 정하고, 비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음.
- 안 제2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 화재에 취약한 주택, 가설건축물을 재난안전취약시설로 규정하였고 이는 현실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재난대피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으로, 규정의 경직성이 실질적 위험을 묵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안 제4조에서 재난대피물품의 사용방해 금지를, 안 제8조에서는 물품의 관리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방연마스크, 소방용 도끼와 같은 재난대피물품을 예시적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물품의 비치 및 지원 기관을 지정하되, 대구시청사 등 단체장의 권한으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곳에는 비치를 강제

하였고, 그 외 공공성이 있는 사회복지 기관 등에는 비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영리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비치를 적극 권면하도록 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신희)

○ 이 제정조례안은

- ▶ 대구시 소재 공공시설 및 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 재난대피물품 비치를 권장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판단됨.

○ 먼저, 현행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6)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7)에서는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의 보급 확대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참고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방연마스크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 조례8)를 제정·시행중에 있음.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①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8) 참고1 전국 시·도 방연마스크 지원 등의 조례 현황

○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 이 제정조례안은 본칙 11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음.
-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재난대피물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피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재난안전취약시설’은 노후·불량건축물,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건축된 주택, 가설건축물로 정의함.

※ 정의(안 제2조제1항)

1. “재난대피물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피에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 정의(안 제2조제2항)

2. “재난안전취약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의 노후·불량건축물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기둥, 벽, 지붕의 일부가 목재 등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건축된 주택

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 ▶ 안 제3조에서는 재난대피물품을 비치·지원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 안 제4조에서는 재난대피물품의 사용 방해 금지를 규정하였음.
-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재난대피물품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 재난대피물품의 종류(안 제5조제1항)

1. 방연마스크, 방연수건 등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한 기체로부터 호흡 보호 물품
2. 손전등, 소방용 도끼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피난을 위한 물품
3. 소화기 등 소화 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대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제5조제1항의 재난대피물품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음.

※ 재난대피물품의 종류(안 제5조제2항)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물품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제품

- 이는 재난대피물품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대구시에 소재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구분(의무/지원/권장)하여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고 표지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재난대피물품 비치 기관 및 시설 구분 〉

구분	기관 및 시설
의무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시의회 청사 2.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지원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재난안전취약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권장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상업시설, 공연 및 관람시설, 숙박시설, 실내형 레저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3. 법률사무소 등 다수인이 상담 등 사무의 처리를 위해 찾는 각종 사업장

[출처 : 조례안]

- ▶ 안 제7조에서는 재난대피물품 비치 지원시설(안 제6조제2항)에 재난대피물품(안 제5조1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 안 제8조에서는 본 조례에 따라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거나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 ▶ 안 제9조에서는 재난대피물품의 비치, 사용방법, 피난요령 등을 홍보 및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 안 제10조에서는 재난대피물품의 내용연수 등을 포함한 비치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 안 제11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 안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였음.

○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안전확보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시 소재 공공시설 및 재난안전취약시설에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할 권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 다만, 관련 시책 추진에 있어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의무 및 지원 대상기관과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및 시설이용자의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재난대비물품을 비치하고, 내용연수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교체주기 설정 및 재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1

전국 시·도 방연마스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황

(2023. 7월 현재)

연번	시·도	조례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소관 부서	비고
1	서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05.01.05. ('23.05.22.)	안전총괄과	
2	부산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07.05.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3	대구	추진중			
4	인천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20.03.30.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05.18.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8	세종	-			
9	경기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04.11.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23.06.09.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11	충북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23.04.07.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12	충남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12.30.	자치안전실 안전정책과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23.04.10.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16	경남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08.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6.10.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규모와 재난대피물품의 종류 등 지원기준이 마련여부와 예산 소요액은 어떻게 되는지?		○ 시청 및 산하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그 외 시설에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임. 현재, 방연마스크 혹은 방연수건을 비치 및 지원할 예정이며, 1억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방연마스크 혹은 방연수건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내용연수가 지나면 폐기하는지?		○ 내용연수는 5년이며, 재난분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인 만큼 해당물품의 내용연수 경과시 폐기할 예정임.	
○ 재난대피 물품 의무 및 지원 대상 기관과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및 시설이용자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재난대비물품을 비치하고, 내용연수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교체주기 설정 및 재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우려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며, 시책추진에 앞서 세밀하게 사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담당자에게 업무가 과중될 것이 우려되는데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는지?		○ 위탁이 아닌 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구·군을 통해 배부하면 행정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5. 토론 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